# 여야 '세종격돌' … 죽느냐 사느냐

## 여, MB 의지 공식화 … 친박 등 반대 세력 설득 나서

## 야, 공조투쟁 선언 … 자유선진당은 의원직 사퇴 결의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27일 세종시 관련 발언으로 여야간 생존을 건 싸움이 시작됐다.

그동안 정운찬 국무총리를 통해 반영된 이 대통령의 의지가 공식화된 만큼 여권은 세종시 방침을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여론전. 국민과 반대 세력을 대상으로 세종시 수정 내지 축소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듯한 분위기다. 야권은 공조를 통한 투쟁을 선언하는 한편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로 결의를 다졌다.

◇여권=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설득을 통한 우호적 여론 형성 뿐이다. 여당내 친박계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30일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최고위원단을 청와대로 초청, 조찬회동을 갖고 세종시 대책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당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국민 설명을 계기로 세종시 대안 마련에 한층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30일 열릴 세종시 민관합동위 3차 회의에서는 세종시 자족성 보완방안, 행정부 분할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한 특별연구팀의 기초연구성과 보고가 이뤄진다.

정운찬 총리는 다음달 초 국민원로회의 위원들과도 분야별로 오찬 회동을 갖고 세종시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야권=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기본 정신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행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며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에 더해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과도 정책연대나 연합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소통하겠다"며 "힘을 모아 여권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무위로 끝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금주 중 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만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친박계와도 자연스레 '소통'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한 내달 1, 3, 8일 청주, 천안, 대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한편 세종시 문제를 혁신·기업도시 문제와 연계, 전국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장외투쟁을 확대하는 등 전면전에 돌입했다. 내달 4일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도 소집했다.

자유선진당은 '의원(17명)직 사퇴 결의'로 배수진을 치며 전면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혹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한상률 게이트' 공세 주춤

## 폭로전 자제 … 추가 정보구하기 전념

민주당이 이른바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여권의 공격에 속도조절을 하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야당으로선 정권 실세가 거론되는 '호재'임에도 불구, 폭로전을 자제하며 추가 정보구하기에 전념하고 있는 것.

민주당은 일단, 지난 25일 1기가바이트(GB) 분량의 '안원구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민주당 행보는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다. 파일 공개 후 이렇다할 대여 공격이 없는 것.

민주당은 또 공개된 자료 외에 안국장 등으로부터 입수한 소설책 한권 분량의 문서자료(1기가바이트 분량)와 음성파일(3기가바이트)을 더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함구령'을 내리고 외부 유출도 금지하고 있다.

조사단에서도 단장인 송영길 의원과 이춘석 의원 등과 실무자 1명 정도만 자료에 접근하고 있을 정도다.

이같이 민주당이 신중한 것에 대해 'BBK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당력을 총 집중했으나 실패한 것과 관련, 섣부른 대응 때문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로전으로 나갈 경우 오히려 여권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신중한 태도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4대강 예산 심의도 '일촉즉발'

## 이번주부터 새해예산안 본격 심사

국회는 이번주부터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4대강 예산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음달 2일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3일 오전 예결특위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예결특위의 추후 심사일정을 협의키로 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4대강 예산.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해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장외투쟁과 함께 세종시와 4대강 문제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을 넘겨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예산안 심의의 첫 관문은 이번주부터 4대강 예산 심사를 벌일 국토해양위다. 국토해양위는 12월1일께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4대강 예산 3조5천억원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내년 4대강 사업예산 지역 편중 심화

## 영산강 9.6% 낙동강 58.7% … 6배差

### 민주 강운태의원 주장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사진)은 29일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낙동강에 편중된 반면 영산강에는 전체의 10% 미만으로 편성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국무총리실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10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4대강 예산 6조7천억원 가운데 낙동강 수계에 배정된 예산은 3조9천352억원으로 전체의 58.7%에 달했다. 한강에는 1조318억원(15.4%), 금강 9천991억원(14.9%), 영산강 6천420억원(9.6%)이 각각 편성됐다. 이는 영산강 예산이 낙동강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또 수질대책 사업비 등 환경부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1조2천873억원 중에는 낙동강 예산이 4천695억원(36.4%)으로 가장 많았고 한강 4천369억원(33.9%), 금강 2천788억원(21.6%), 영산강 1천21억원(7.9%)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4대강 중 수질이 가장 나쁜 영산강에 전체의 10%도 안되는 예산을 배정한 것은 4대강 사업이 낙동강 중심의 한반도 대운하 전초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치수사업에서 조차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 "서울시장 출마"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서울에 없었던 진보 시장의 탄생이 필요하다"며 "서울을 위해 존재하는 서울시민이 아니라 서울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공교육 선진화, 공공임대주택 다량공급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진보신당에선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심상정 전 대표도 경기도지사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내년 1월 지방선거 후보선출 완료를 목표로 현재 광역,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후보군으로 250여명을 발굴하는 등 후보 물색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이수호 최고위원, 박승흡 전 대변인, 이상규 서울시당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